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6. 9. 18

제안자 : 김성인 의원 외 4인

주 문

- 정부는 우리의 식량자급기반을 위협하는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 방침을 철회할 것이며
-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감안할 쌀 수매가 인상 및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보상제도를 시행하고
-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 적정면적의 농지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진흥 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는데, 우리 의원 모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제안이유

- 그동안 식량위기의 도래를 누누히 강조하면서 식량자급기반 구축을 요구하는 농민과 농업관련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 3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농민들의 쌀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가져와 식용쌀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급기야 식용쌀 수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농민들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건을 제안함.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문

1.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방침을 철회하라.

“쌀 수입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 “쌀 수입은 불가피 하다. 쌀 수입하더라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 “식용쌀 수입은 불가피 하다.” 로 이어지는 김영삼 정권의 소위 불가피론은 무능정권임을 입증한채 마침내 식량자급기반을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농민 농업관련 학자들이 식량부족의 위기를 누누히 강조하고 시급히 식량자급기반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할때 정부는 국내쌀이 남아돈다며 3년연속 수매가동결 재벌에 대한 농지규제 완화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당장 식량부족사태가 눈앞에 닥치자 식용쌀을 수입하는 등 신농정이 몰고 온 농업파탄을 또다시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농민들의 “식용쌀 수입반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산 식용쌀이 독성약품으로 범벅이 되고 각종 곰팡이가 피어 썩은 상태에서 들어와 화순군만 해도 능주면 동일정미소 창고와 화순읍 대리 창고에 입고 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7월 19일 김영진 의원이 국정 질의에서 “지난 6월 켄터 미상무 장관의 한국방문시 미국쌀 150만섬 추가도입 밀약설”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재경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가수입 불가피설이 흘러나오는 등 쌀 추가 수입검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일동은 김영삼 정부의 수입 쌀의 식용으로의 전환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수입이 강행될시 화순농민들의 뜻과 행동을 같이 할 것임을 결의한다.

2. 정부는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8월 23일 민자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하여 WTO 협정을 이유로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은 공공요금, 평균 30%씩 오르는 의료 보험료 등 물가인상률에 비추어 볼 때 쌀값의 3년연속 동결은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철저히 짓밟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소득보장없는 농정으로 현재의 식량위기상황을 몰고왔던 정부가 또다시 그러한 오류를 범하려 하고 있으며, 수매가 동결은 쌀산업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올해마저 수매가를 동결시킨다면 급속도로 쌀 자급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영농기반은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감안한 쌀 수매가 인상,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보상,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면적의 농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 진흥지역의 확대 등 실질적인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대정부 건의와 국회건의, 그리고 농민과 함께하는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1996. 9. 18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